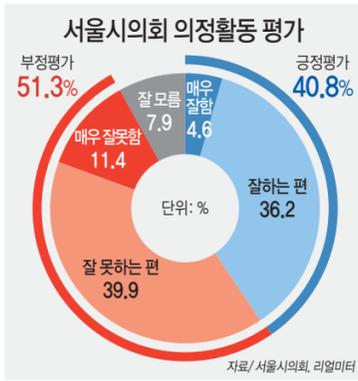


“시의회 존재감 없다”... 시민 10명 중 6명 ‘기대 안해’

서울시의회 인식 조사

의정활동 ‘못한다’ 51.3% 응답
성과부족 31.5%로 가장 많아
시민들 체감도 높은 의정 요구



서울시민의 절반 이상은 서울시의회와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민 10명 중 6명은 올해 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답해 지역 의원들이 주민들과의 소통을 계율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서울시의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월 7~8일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의회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

관으로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 감사·조사, 시민청원처리 등의 역할을 한다.

서울시의회는 천만 서울시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이지만 존재감이 거의 없었다. 서울시의회나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75.8%가 ‘모른다’고 답했다. 알고 있음은 24.2%로 미인지 응답 비율이 3배 이상 많았다.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이었다. 서울시의회를 알고 있는 시민 24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못한다’가 51.3%로 긍정평가(40.8%)보다 10.5%p 높았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성과 미흡’이 31.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원들에 대한 신뢰 상실(17.6%), 사적 이익 추구(16.6%), 시민소통 부재(12.1%), 홍보 부족(7.6%), 경제 악화(5.4%), 세금 낭비(4.2%) 순이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시의회의 주요 기능은 ▲시민 의견수렴/민원해결 등 주민대표 역할(48.4%) ▲시 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 견제/감시 역할(35.1%) ▲조례 제·개정 등 입법/의결 역할(11.5%)이었다.

올해 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 정도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62.9%가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해 정치 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대한다는

답변은 33.5%로 적었다.

서울시의회의 주요 의정활동(지난해 8~11월)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광화문광장 조기완공 강행 무리수’가 30.4%를 차지해 1위로 꼽혔다. 성범죄·음주운전 교사 성과급 지급(20.6%), 비정규직 전환 관련 토론회 개최(16.9%), 역세권 청년주택 지원 개정 발의(16.8%), 서부간선 지하도로 싱크홀 위험 지역(9.8%), 따릉이 단말기 고장(8.8%), 지하철 내 설치 미술품 관리 부실(8.4%), 성북4재개발 해체구역 실태 점검(6.7%), 서울시장 위법 부당사항 의회 제보(5.7%), 택시 조수석 에어백 미설치 지적(4.6%), 자치분권종합계획 후속 보완조치(3.8%)가 뒤를 이었다.

시민들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체감도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줄 것을 시의회에 요구했다. 시민들이 시의회에 가장 바라는 점은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19.3%)이었다. 신뢰·도덕성·사리사욕 등 의원 태도 개선(15.6%), 예산·정책 등에서 투명·청렴한 행정(8.3%), 적극적인 시민소통 및 의견수렴(6.9%), 일자리·소상공인·부동산 등 경제 활성화 노력(6.6%), 불필요한 예산 낭비 줄임(5.5%) 순이었다.

리얼미터는 “서울시민의 70% 이상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시의원과의 의정활동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의원들의 잦은 시민소통과 교류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높은 성과를 증명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좀 더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의회는 “서울시의회의 전반적인 의정활동 평가와 홍보활동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해 향후 시의회 정책 수립과 홍보계획 등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9호선 지옥철 오명 벗어나... 36량 추가 투입

450억 투입 6량 열차 6편성 추가
향후 신설 노선의 미래 수요 대응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인 둔촌오류역에 전동차가 들어서고 있다. /김현정 기자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9호선 혼잡도 개선을 위한 전동차 증편 추진계획’을 내놨다.

오는 2022년까지 6량짜리 열차 6편성을 추가해 총 36량을 증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계획이다. 약 4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1량은 열차 1칸, 1편성은 여러 칸을 묶어 한 번에 다니는 전동차 전체를 뜻한다. 현재 9호선은 45편성으로 운행되고 있다.

시는 9호선 증편으로 대곡소사선, 신림경전철, 위례신사선, 신분당선 연장선, 신안산선 등 향후 9호선에서 환승할 수 있는 신설 노선의 미래 수요에 대응

한다는 목표다. 지하철 열차는 제작에만 2년가량 소요되고 실제 투입까지 4년 넘게 걸리는 만큼 증편 계획을 미리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9호선 이용자는 지난해 12월 삼전역~중앙호병원역 3단계 개통 이후 기존 58만명에서 66만명으로 13.8% 증가

해 혼잡도가 높아졌다. 출근 시간대 혼잡도는 급행 기준 172%로 서울 전체 지하철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혼잡도는 열차 1량에 승객이 160명일 때를 100%로 보고 계산한다. 예컨대 320명이 타고 있으면 200%다. 1~8호선 중에는 2호선 170.3%, 4호선 159.7%, 7호선 155.9% 등이 혼잡도가 높은 편이다.

시는 새로 추진할 증편 작업과 별개로 9호선 모든 편성을 열차 6량으로 늘리고 있다. 현재 9호선 급행은 전부 6량이고 일반 열차는 6량과 4량으로 구성돼 있다. 1편성에 8량 이상이 대부분인 다른 호선들보다 열차 수가 적다.

시는 연내 6량화 작업이 완료되면 9호선 혼잡도가 154%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13~14일 지하철·버스 막차 연장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

서울시는 추석에 맞아 13~14일 지하철과 버스 막차 시간 늦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운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하철 1~9호선과 우이신설선은 종착역 도착 시간 기준으로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출발 시간 기준으로 몇 시에 탑승할 수 있는지는 역과 행선지에 따라 다르므로 역에 부착된 홍보물이나 안내방송을 확인해야 한다.

시내버스도 익일 오전 2시까지 운행한다. 기차역 5곳(서울역·용산역·영등포역·청량리역·수서역)과 버스터미널 4곳(서울고속·동서울·남부·상봉터미

널)를 경유하는 129개 노선이 그 대상이다. 버스는 기차역과 터미널 앞의 버스 차고지 방면 정류소 정차 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2시까지 운행한다.

올빼미버스 9개 노선과 심야 전용 택시 3100여대도 연휴기간 내내 정상 운행한다. 성묘객을 위해 13~14일 용미리(774번), 망우리(201, 262, 270번)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4개 시내버스 노선의 운행 횟수를 늘린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도 늘린다. 경부고속도로 한남IC~신탄진IC 구간의 버스전용 차로는 11~15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영한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징계 걱정없이 행정에만 집중”

‘적극 행정 추진 기본계획’ 마련

경기도는 공무원들이 징계 등을 걱정하지 않고 마음 놓고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 행정 추진 기본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법에 어긋나지 않고 공익에 부합하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기본계획은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우대, 보호 지원, 면책 사항 등을 담은 4개 분야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도는 다음 달까지 적극 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사무 전결 처리규칙을 개정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 행정 의사결정기구인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를 신설한다.

도는 성과평가를 통해 반기별로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의무적으로 부여할 방침이다.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 보호, 지원도 강화한다.

감사관을 통해 사전컨설팅을 받거나 지원위원회 제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더라도 징계 등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면책 심의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현장 면책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공무원에게서 면책심사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면책 기회를 제공하는 ‘직권 감사면책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업무처리도중 민·형사상 고소·고발 및 소송을 당하면 변호사를 지원해 보호하기로 했다. /경기(의정부)·김승열 기자 kimsy@

서울시 “광화문 산책 함께해요”

서울시는 역사전문가와 함께 경복궁과 광화문 일대를 함께 걷는 ‘광화문 역사산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광화문 역사산책은 경복궁과 더불어 광화문 일대의 문화유산이 갖는 의미와 일제 강점기 훼손된 역사를 다시 돌아보는 행사다. 광화문시민위원회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9일부터 진행된다.

경복궁의 복원인 신무문에서 근정전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코스로 구성됐다. 역사산책 후에는 광화문광장 내 해치마당 소풍방에서 역사광장 복원의 필요성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영창 서울시 광화문광장기획반장은 “역사 복원은 우리 역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전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25개국서 75개 프로젝트 접수

서울시는 ‘제1회 휴먼시티 디자인 어워드’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휴먼시티 디자인 어워드는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사람, 사회, 환경, 자연과의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관계 형성에 기여한 도시 디자인 프로젝트(디자이너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시는 지난 6월 공고를 통해 전 세계 25개국에서 75개 프로젝트가 접수됐고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12개 프로젝트가 최종 수상 후보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심사위원단은 ‘창조도시’의 저자이자 도시 혁신의 권위자로 평가받는 찰스 랜드리, 에치오 만치니(밀라노 폴리테크닉대학 디자인 명예교수), 마리아나 아마츨로(푸물러스 회장), 루 옹기(상하이 통지대학 디자인&혁신 학장), 유현준(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등



휴먼시티 디자인 어워드 수상 후보 프로젝트 (Big Shelf). /서울시

디자인·건축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찰스 랜드리 심사위원장은 “인간, 지역과 관련된 디자인적 접근성을 중요하게 평가했다”며 “참여적 접근법을 가진 프로젝트가 좋은 점수를 얻었다”고 말했다.

심사위원단은 12개 프로젝트에 대한 현장 확인과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 수상자를 가린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억원과 트로피를 수여한다.

시상식은 9월 26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다. 최종후보에 오른 작품은 이달 20~26일 DDP에서 개최되는 ‘2019 서울디자인위크’에서 만나볼 수 있다. /김현정 기자